

# 철강·자동차·조선 ‘연쇄파업’ 우려… ‘兆 단위’ 손실 직면

포스코, 사상 첫 파업 ‘떡구름’  
현대제철, 올 임금협상 조건 제시  
현대차, 피크 아웃 부분파업 우려  
“노사 간 양보… 대승적 결단 필요”



지난해 임금협상 상건례 갖는 현대차 노사.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내 산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매년 이같은 일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산업계 전반의 체질개선에 따른 인력 구조 변화로 전체적으로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특히 ‘산업의 쌀’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자동차, 조선 등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이 임금 협상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7일 경북 포항 본사 앞에 모여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을 알렸다. 포스코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

입한 것 창립 55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중노위 조정기간 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중노위에 쟁의

행위를 신고하면 파업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곤혹을 치른 현대제철은 올해도 파업 위기에 놓였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합원 87.33%가 찬성하며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협상 조건으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의 25% 특별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하기 휴가 및 산정 휴일 확대 등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양사 모두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간 인건비 총액의 70%를 넘는 수준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현대제철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 46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4% 감소한 수준이다.

만약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고로를 갖춘 일관제철소라는 점에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가동하는 연속 조업 체제인 일관제철소 특성상 일부라도 조업이 중단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노사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만형인 현대차는 지난달 18일 열린 17차 교섭

이후 노조가 파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 91.76%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8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권도 확보했다. 노사는 지난 11일 2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앞둔 상태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매분기 영업이익 상승기조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오랜 기간 노조의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 비용을 부담해 왔다. 지난 2016년 노조의 24일에 걸친 파업으로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3조1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노조가 24일간 파업을 강행하면서 생산 차질 대수만 8만9000대, 손실액은 1조8900억원에 달했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의 움직임에 다른 사업장 노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9월 13일 1시간, 14일 7시간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 9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고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합법적 파업권을 얻었다.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 산업 현장이 멈춰설 경우 이와 연관된 산업 전체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간 양보를 통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 고물가에 과일·채소 안먹어 비뚤이 농산물로 소비 대응

3高 따른 농식품 소비행태 변화  
유통기한 임박 등 실속형 소비 급증 ↑

소비자들은 물가가 급상승한 최근 3년 동안 과일, 채소의 소비를 우선 줄였고 비뚤이나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 소비를 늘리며 대응했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소비자 표본 1500가구의 농식품 가계부 자료를 활용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3년간 진행된 3고 현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선식품 구매액은 2019년 37조8610억원에서 2020년 41조8440억원→2021년 42조6330억원→2022년 39조7170억원이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식품 구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해 코로나19 발생 전 추세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가 2019년 95.5에서 2022년 112.4로 17.7% 급등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

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채소, 축산물, 과일 순으로 높았지만, 과일의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소비자는 물가가 오르면 농축산물 중 과일 구매를 가장 많이 줄였다. 반면, 가격이 내릴 경우, 구매를 늘리는 농산물도 과일 비중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필수재 성격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속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속형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비뚤이 농산물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이 19.1%로 가장 많았다. 또 가격에 부담을 갖는 소비자는 마감 할인 등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을 주로 찾았고, 구매와 조리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냉동농산물을 선호했다. 맛, 안전성 등 종합적인 선호도는 비뚤이 농산물이 일반농산물 다음으로 높았다.

/차상근 기자 skc8472@